

올해 전북 마을기업 10곳 심사 통과

신규 2개소·2차 년도 6개소... 사업비 신규 5,000만원·2차 년도 3,000만원 각각 지원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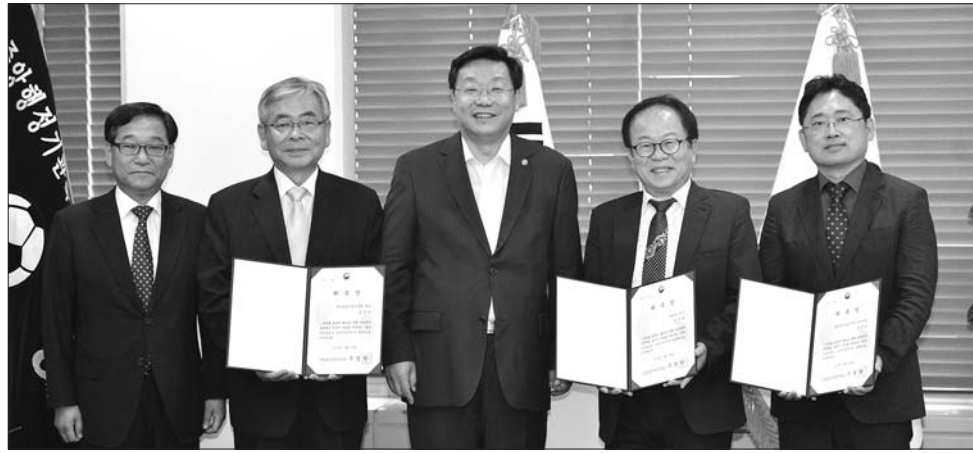
전북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업으로 신규 2개, 2차 년도 6개 등 총 10개 도내 마을기업이 행정자치부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각층 자원을 활용할 수의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 선정 심사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 중 1차 시군을 통해 추천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도 심사를 거쳐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심사위원회는 공동체 구성 및 사업 계획 적절성과 재정 건전성 및 자부담 능력, 지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 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 마을기업 선정 심사는 마을기업의 양적 증가를 지양하고 질적 성장 도모에 목표를 둔 행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더욱 엄격하고 까다롭게



평창올림픽에 로봇 활용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로봇지원단 총감독인 오준호 키이스트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지정률은 62.5%로 전국 평균 지정율인 53.1%(최고 66.6%, 최저 2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심사에서 선정된 마을기업은 신규 5,000만원, 2차 년도 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지원받게 되며 마을

기업 중간지원기관인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밀컨설팅·맞춤형 교육·각종 홍보 및 판로 지원을 받게 된다. 유희숙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마을기업 발굴과 함께 보조금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사업개발 및 판로 지원 등 사업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의 편향은 일자리 및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신규 선정된 4개소를 포함해 도내 총 102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고민형 기자

주민등록 서식 29종 작성 쉬워진다

가족 모두 이사시 작성 항목 24개에서 7개로 대폭 축소

앞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등 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민원인의 작성항목이 최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29종을 국민이 알기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전입신고 유형 중 약 65%(전체 610만건 중 400만건)에 해당하는 가족 모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에 민원인이 작성하는 항목이 24개에서 7개, 세대주 성명 기재도 6회에서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또 그동안 모든 주민등록 서식에서 신고인 성명을 상단과 하단에 2회 작성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유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또 모든 주민등록 서식의 주소는 민원인이 시·군·구까지만 작성하면 나머지 상세 주소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시·군·구

단위로 운영)의 정보를 활용해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한다. 작성내용이 서로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고 종전에 무리하게 통합해 작성에 혼란을 주는 서식은 분리한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신청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 신청서와 작성 내용이 유사한 점을 감안해 통합한다.

반면 신고내용이 다른 국외이주 신고서는 전입·재등록 신고서와 분리해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임시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A4크기에서 주민등록증 크기로 축소 개선했다. 지금은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 제출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항목이라는 '주민등록 온라인 마스터'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 서식 개선은 근거규정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뉴스

재난보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국민안전처가 재난보험 총괄·조정 기능을 갖고 재난보험 정책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보험의 육성을 위해 재난보험 관계부처와 협의해 5년 마다 재난보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재난보험 관계부처에서 보험 제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안전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재난보험 사업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책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안전처 장관과 재난보험 관계부처에서 재난보험 통계와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안전처 장관이 재난안전법(대인배상 1인당 1억5000만원)에 맞추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뉴스

사드 지역 발표 이르면 금요일~다음주 초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 레이더·포대 분리 발표 시 일부는 공개 안할 수도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등에 대한 최종 발표 시점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항의 시발에 나서거나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역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난 주 금요일(8일)에 사드 배치 공식 발표가 있었던 만큼 가능하면 오랜 기간을 두지 않고 알릴 부분은 얼른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군의 한 관계자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날 오전 KBS 일요일단에 출연해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이미) 결정된 상태"라며 "부지 선정

을 놓고 발생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8일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선언하며 배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 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말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졸속·밀실 추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급속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미 군 당국은 이번 달 말로 예상했던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배치 지역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발표를 미룰 경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군 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

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장소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발표가 미뤄지는 것과 관련, 사드 레이더와 사드 포대의 '분리 배치'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거리(600~800km)로 인해 중국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후방 지역에 레이더를 배치하되 포대는 중부권이나 수도권 인근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 군 당국이 최종 발표를 하면서 레이더와 포대 중 한 곳에 대해서만 대략적인 위치를 공개하고 분리된 나머지 한 곳은 작전 보안상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전날 방송에서 "작전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내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돼왔기 때문에 시·군 정도 수준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

황 총리 "신혼부부 임대주택 13만5천가구 공급"

'인구의 날' 기념식 축사...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여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전·월세 임대주택 등 13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 마련에 필요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의료비를 대폭 경감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도 높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총리는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 인구 위기 극복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우선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데 진력하겠다.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준다"고 강조했다. /뉴스

그러면서 "만혼(晩婚)이나 비혼(非婚)의 문제도 부족한 일자리와 높은 주거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이지만 만큼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 등에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아울러 "육아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부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 일·가정 양립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힘을 합치면 지금의 인구 문제도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세운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 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